



3면

윤석열 조준한 추미애 장관 "한명숙 사건 검찰무마 조사중"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윤 4월 28일) 제2560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가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군산형 일자리 해법찾기 모색

###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 갖고 정부 공모 논의 TF팀 꾸려 핵심 상생요소 등 대응논리 개발 주력

전북도(지사 송하진)와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8일 군산대학교에서 5개 전기차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의 노사 대표, 양대 노총 군산시지부, 유관 기관 등이 참석,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전기자동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생협약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상생협약 체결 이후 그간 실무추진위원회의 컨설팅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협약 이행방안, 사업계획 구체화, 상호연계성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산업부 공모 신청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상생협의회 22개 기관과 JIA(T(자동차융합기술원)는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간 상호연계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Value-Chain(가치사슬)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내용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참여기업 간 공동 R&D사업

추진, 부품업체 공동구매, 원자재 공동거래, 공동인력양성 등 10개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Value-Chain 연계사업을 통해 사업개시 후 3차연도 까지 총 3,647억 원의 비용절감을 통해 참여기업의 영업이익이 88%까지 증가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와 군산시는 이번 10개 연계사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추진,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산업부는 상생형 일자리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고시를 4월 발표했다.

공모방식은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준비된 일자리 모델부터 신청, 수시 심의를 거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규

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본요건은 상생협약 확정, 3년 이내 200억원 투자, 3년 이내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 목표, 과거 연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상호연계성 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만 본 심사인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선정절차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지원단의 서면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상생형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달부터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TF팀을 꾸려 핵심 상생요소,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현재는 산업부 사전 검토단계를 밟고 있어 산업부와 조율이 끝나면 6월 말경 정식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7월에 민간합동지원단 현장심사와 상생형 일자리 심의회를 거쳐

7월말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실에서 "코로나 19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만큼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희망으로, 노사 상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르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지역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기업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오늘로써 준비 단계를 지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행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 사, 민, 정 각 주체가 자유의지를 가지면서도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공동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주여고 3학년 접촉자 963명 모두 음성... 감염경로는 아직

### 전북도 보건당국, 밀접접촉자 40명 자가격리 조치

전북도내 22번째 확진자인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A(18)양과 직간접 접촉한 전원(963명)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18일 도청 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양의 13~17일 이동 동선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보건당국은 가족(3명)과 전주여고 학생 및 교직원(890명), 미술학원 강사와 학생(69명), 친구(1명) 등 A양과 직간접 접촉한 963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가졌다. 다행히 검사를 받은 전원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다.

또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4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전날 또는 이날부터 자가격리된 인원은 A양의 가족

(3명)과 친구(1명), 전주여고 같은 반 학생(29명)과 A양이 방문한 전역있는 두기떡볶이 종업원(2명) 및 손님(2명·미확인), 옷가게 종업원(2명), 안경점 종업원(1명) 등 총 40명이다.

이중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A양이 찾았던 두기떡볶이 손님 2명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 A양이 다니는 전주여고는 이용제한을, 미술학원은 폐쇄조치, 같은 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가로 확인해야 감염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면서 "A양과 접촉한 2~3일 후 코로나19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전주시민은 앞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처럼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출생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송준상)는 출생장려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구다. 감면금액은 월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사용료 7200원과 하수도 사용료 4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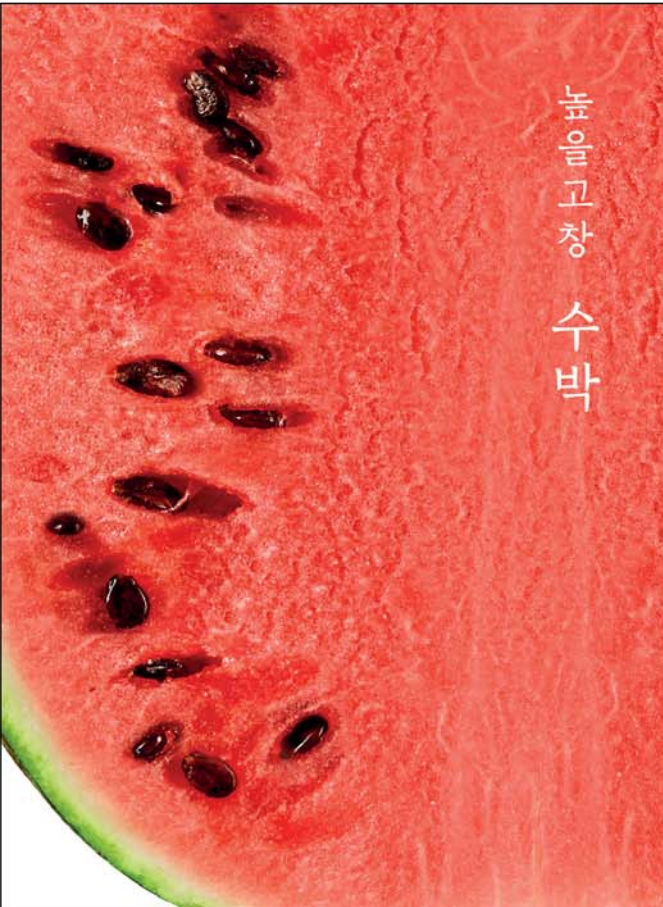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 가정 약 1만여 세대가 매

월 1만2000원, 연간 13만44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신청은 오는 7월부터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센터의 행정전신방을 통해 감면대상으로 확인돼야 맑은물사업본부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제수용가를 대상으로 주계량기에 요금이 부과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을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장려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높을고창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